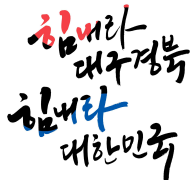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도해명자료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6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	담 당 자	김 윤 희 사무관(2611) 정 태 호 사무관(2612)	

제 목 : 대출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[매일경제 4.6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]

1. 기사내용

- ☐ 매일경제는 4월 6일자 가판 「가계 신용대출, 만기연장·이자유예」 및 「지난달 신용대출 이례적 급증... 코로나 연체 불길 가계도 위협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카드·캐피탈사의 현금서비스·카드론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”
 - “정부가 대출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정부가 “대출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”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만, 정부는 지난 3월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을 발표하면서,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‘신용회복 지원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
- 현재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
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